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 거대한 부패, 그리고 약탈



김성중 작가·추리문학관 관장

한국은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에 어떤 사람은 한국은 지금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와 유럽의 경제 불안 같은 것이 없는 한국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 자기 도취에 빠진 착각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선진국은 경제발전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유국으로 부를 누리는 사우디아라비아나 부르나이 같은 나라를 선진국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선진국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넓쳐흐르는 문화가 있고, 빈부 격차가 없는 복지사회와 함께 흔들림이 없는 윤리의식이 사회 저변을 받치고 있어야 한다.

상류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살아 있고, 거기다 부패가 없는 깨끗한 사회여야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느 것 하나 가진 것이 없다.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패현상이다. 국가 기반을 쏙 먹어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부패가 존재하는 한 한국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오늘날 한국의 부패는 그물망처럼 촘촘히 짜여져있는데다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감히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는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액의 수입이 보장되는 높은 자리는 서로 캐리캐리 나누어 갖는다. 법조인들의 전판이 예우되는 형태, 정부 요직에 있던 자들이 퇴임 후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들어가 중요 정보를 흘려주고 위험을 막아주는 대가로 받는 역대 연봉 등이 그렇다.

또한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권을 움켜쥔 채 내놓지 않으려는 국회의원들의 짙긴 탐욕, 선거 때마다 주머니 받거나 하는 상류층들만의 공천 파티 등은 이제 고질적이다. 시민을 위한 담합이고 벌여놓은 수백·수천억 원의 공공사업이 휴지처럼 쓸모가 없어져 결국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 하수구로 줄줄 흘러내리는 혈세, 정경 유착으로 인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투쟁을 열면 터져나오는 상류층의 비리 백태 등 열거하기조차 어렵다.

교육계라고 예외는 아니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들은 울상이고, 대학 당국은 차비도 안 되는 강의로료 시간강사들을 착취하고 있는데도 고액 연봉을 받는 교직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안전만을 피하고 있다.

연전에 일본 외상 마에하라 세이지가 식당을 운영하는 재일교포 할머니한테서 4년에 걸쳐 25만 엔(약 270만 원)을 정치 헌금으로 받은 것이 발생이 되어 사임한 일이 있다. 거기에 비해 한국인들의 비리 액수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역대 대통령들과 그 처자식들, 또 그 형제가 총횡으로 해먹은 횡령액은 수백·수천억 원에 이르고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사과 상자로 윗길 현찰만도 입이 벌어질 정도로 엄청나다.

상류층의 끊임없는 탐욕은 결과적으로 서민에 대한 약탈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횡령하고 그들 때문에 흘러들어가 혈세는 모두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 막이다. 저축은행 사태 하나만 봐도 그 실상이 어떠한지 알 수가 있다. 정상적인 은행 대출금마저 막인 불

쌍한 서민들은 제2금융권에 손을 내밀지만 간교한 금융권은 고액의 이자로 약탈적 대출을 일삼는다.

그마저 막히면 결국 사채업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자가 가히 살인적이다. 우리 사회 구조는 상류층에는 항상 관대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서민들에게는 가혹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

이처럼 비리 탐욕 낭비 부도덕 약탈 등 모든 악덕은 다 가지고 있는 마당에 무슨 수로 선진국 국민이 되겠다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상류층이 더 이상의 탐욕을 멈추고 높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는 일이다. 최근 스위스는 날로 커져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고액 연봉자들의 보수를 삭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 정도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 같은 방침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국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절약과 검소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자원 하나 없는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는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지금까지 절약과 검소를 국정의 기반으로 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 의료칼럼

### 선수술 후교정



김수관 조선대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립(교합)이 변화된다는 점이 차이가 있으므로 안면윤곽술과 비교해 난이도가 더 크다. 여기에 턱뼈 이동에 따른 턱관절 변화 등에 대한 고려와 이동된 턱에 맞는 치아의 물림 개선을 위한 교정치료가 필수다.

얼굴뼈 기형은 주걱턱, 안면 비대칭, 무턱, 돌출입, 긴 얼굴들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런 경우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인 악교정 수술은 수술 전 교정치료를 어느 정도 한 후 악교정 수술을 받고 마무리 교정을 하는 순서를 거친다. 하지만 총 교정치료가 기간이 20개월 이상으로 매우 오래 걸리게 되며, 술전 교정치료가 기간 동안 얼굴의 모습은 더욱 악화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술전 교정치료가 치아배열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교정 수술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골격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술 시기가 미뤄져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길어지게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수술 기법, 재료 등의 발

달에 따라 수술 전 교정을 거치지 않고 악교정 수술을 먼저 시행한 후 슬후 교정치료를 통해 마무리하는 ‘선수술 후교정’의 방법이 등장했다.

선수술의 경우 먼저 진단을 통해 환자를 분석한 뒤, 슬후 교정단계에서 배열한 치아 모형을 이용해 미리 예측하고 이를 기준으로 악골의 이동량과 방향을 결정해 수술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선수술 후교정 치료의 최대 장점은 슬후 교정 치료의 진척이 빠르며 치료단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되고, 비발치 선호 수도로 전술적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치열의 바른 배치를 최단기간으로 단축시켜 전체적인 치료기간이 18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환자는 수술을 통해 빠른 얼굴 모양의 개선을 얻을 수 있고, 술전 교정치료 동안에 나타나는 얼굴 모양의 악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과정을 거친다면

치료결과가 안정되게 되며 환자의 협조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수술 후교정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술전 계획단계에서 턱교정 수술 및 교정 완료 후 연조직 변화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여야 하고, 모형상에서 슬후 치아의 배열 상태 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술 후에 교합이 술전 교정에 비해 불안하기 때문에 교합의 바른 배치를 최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술전 진단 및 계획수립이 최대한 긴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정과 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안면의 윤곽뿐만 아니라 치열의 교합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교정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의 시행이 중요하다. 얼굴 모양의 변화가 심한 악안면기형 환자들의 경우, 빠른 얼굴 변화와 치료기간 단축을 바란다면 선수술 후교정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

### 기고

### 관료조직에도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박철홍 전남도회의 의원

2007년 울산시와 서울시부터 시작한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어 한 때 관료세계를 긴장시켰다. 당시 분위기로는 ‘공무원=철밥통’ 공식이 깨지는 가 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한 때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저 또한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 관료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반대한다. 그런 충격요법은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관료세계 변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본다.

관료세계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지난 2002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끔찍한 9·11테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언론에 발표되어 미국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다. 조사 위원회는 9·11테러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 관료조직의 상상력 부족을 지적했다.

‘미국 관료조직에 조금의 상상력만 있었어도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역사상 유례없는 테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테러 때문에 이어지는 두 번의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9·11테러 조사위원회가 미국 관료조직의 상상력 부족을

타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이미 ‘알가에다’ 같은 테러 조직은 9·11테러 이전에 자동차나 배에 폭탄을 실어 자살공격을 세계 곳곳에서 수없이 자행해 왔다. 미국 관료조직이 조금이라도 상상력을 발휘했다면 그다음은 비행기를 이용해서 엄청난 테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관료조직은 그러한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대비를 못 해서 결국 이런 엄청난 테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즉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엄청난 관료조직이 일개 테러집단의 상상력을 따라가지 못해서 인위에게 엄청난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 조사위원회 결론이었다. 미국의 관료조직은 우리와 많이 다르고 훨씬 더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럼에도 상상력 부족으로 엄청난 사건을 불러 일으켰다는 오명을 쓰고 질책을 당한 것이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가고 있고 관료조직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상력 없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관행에만 얽매어 일한다면 그 조직은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우리가

관료조직도 지난날 해 온대로 ‘공무원=철밥통’의 기득권에만 안주해 스스로 정확해나지 못한다면 주민의 비난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고 또다시 무능공무원 퇴출 운동 같은 외부 충격이 타쳐올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서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할 지점에 와서는 더욱 그렇다. 지역사회발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꾸어나가야 못했던 것들을 상상력 하나로 만들어 내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 선지자들에게 비하면 요즘 관료들은 그들이 맡고 있는 지역만 생각해보도 수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지 그러한 것을 허황된 공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꿈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화시켜갈 수 있는 실천과 행동이 필요할 뿐이다.

꿈만 가지고 실천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한다. 이처럼 관료조직에도 상상력을 가져야 하는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 경제 능력 충분한 다문화가정 무조건 지원은 문제

다문화가정 120만명 시대라고 한다. 앞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늘고 그 영역이나 사회적 지위도 커질 게 분명하고, 이들을 위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정에 한해 소득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분들을 위한 배

려가 필요는 하지만 다만 한가지 약간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제시코자 한다.

현재 내국인 가정은 소득 하위 70%에 속해야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조건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기 때문이다. 자칫 다문화가정 보육료의 보편적 지원은 오히려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자가 한 대 있고 2억여원의 전세를 살아도 월 인정소득이 상위 30%(480만원 초과)에 해당돼 보육료를 못 받는다.

다문화가정의 보편적 보육료 지원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끌어준다 면에서 의미가 있는 정책적인 인정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굳이 지원이나 배려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우대만 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지원은 해주고 소득에 맞게 차등을 두는 게 맞다고 본다. ▲정점순·목포시 대양동

### 社說

### 군 공항 이전 과제 산적, 정부가 적극 나서야

50년 가까이 광주시민에게 전투기 소음피해를 안긴 광주 군 공항을 도심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대체 부지 마련, 거액의 이전비 조달 등 실제 이전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정부가 직접 나서 행거기 않으면 안 된다.

국회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게 되며,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대선을 30여일 앞둔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군 공항 주변 주민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 지난 2004년 날로 커져가는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비상조치로 고액 연봉자들의 보수를 삭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70% 정도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이 같은 방침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국은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절약과 검소를 국정의 기반으로 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 무등산보호단체 ‘밥그릇 싸움’만 할 건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무보협)가 내부 갈등으로 극심한 내용을 앓고 있다.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에 소송과 물리적 충돌 등 감정이 쌓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2월 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선임에 대해 ‘무보협 정상화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비대위는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한다”며 법원에 신임 부분장에 대한 선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부는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비대위 측 이사 8명을 해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윤영까지 동원해 비대위 인사의 참여를 막는 과정을 거듭했다. 이날 집행부가 최정기 전 전남대 교수를 상임공동의장으로 선출하자 비대위 측도 별도로 이계운 전남대 교수를 상임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제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무보협이 양측 진영으

로 나누어 운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1989년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에 소송과 물리적 충돌 등 감정이 쌓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2월 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선임에 대해 ‘무보협 정상화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비대위는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한다”며 법원에 신임 부분장에 대한 선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부는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비대위 측 이사 8명을 해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여기에 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윤영까지 동원해 비대위 인사의 참여를 막는 과정을 거듭했다. 이날 집행부가 최정기 전 전남대 교수를 상임공동의장으로 선출하자 비대위 측도 별도로 이계운 전남대 교수를 상임공동의장으로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제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무보협이 양측 진영으

로 나누어 운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 1989년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에 소송과 물리적 충돌 등 감정이 쌓이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2월 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선임에 대해 ‘무보협 정상화 촉구’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비대위는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단체를 운영한다”며 법원에 신임 부분장에 대한 선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집행부는 지난 6월 임기가 만료된 비대위 측 이사 8명을 해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 無 等 鼓

시퀘스터(seqester)란 ‘격리한다, 가압류한다’는 뜻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예산 삭감을 뜻하는 용어로 알려지고 있다.

시퀘스터는 지난해 말 재정장단에 직면한 미국이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을 진행하며 미봉책으로 합의한 것이다. 올 1월1일부터 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퀘스터 발동시한을 한차례 연기해서 시퀘스터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난 1일부터 시퀘스터가 발동돼 2013년 올해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854억 달러(한화 약 92조 원)의 예산을 자동으로 삭감하게 되고 향후 10년 동안 총 1조 2000억 달러를 자동으로 삭감해야 하는 조치를 말한다.

1980년대 시퀘스터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균형재정을 달성하는데 기여했으나 최근 경기부양 및 복지를 위한 예산이 늘어나고 공화당 및 민주당 대립이 심화되면서 시퀘스터는 재정절벽을 현실화 하는 수단이 되어 왔다.

시퀘스터 발동은 미국경제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아시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내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지만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시퀘스터의 원인은 백안관과 미의회가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갈등의 골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깊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정치의 기본적인 행동양식을 버리고 당파 싸움에 매몰돼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국내에서도 역시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온데간데 없고 불통의 정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병목’에 막혀 장기 표류하고 있고,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쥐고 가슴을 치며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을 천명하는 등 민주정치의 기본 행동양식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시퀘스터가 바로 이러한 불통의 정치 산물임을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b>光 卍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논설주간 <b>申培樂</b> 편집국장 <b>奇賢鎔</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정)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서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